

데스크 시각



윤현식
정정부 부국장

우리나라 '시장주의자'들이 모델로 하고 있는 미국의 주거 문제는 이미 심각한 수준을 넘어섰다. 노널드 트럼프의 허쉬 머니 재팬, 우크라이나-가자 전쟁, 대학 내 진팔레스타인들의 항의 집회 등 굵직한 이슈들 속에서 미국을 달구고 있는 또다른 이슈는 홈리스(Homeless)다. 미 연방 대법원이 지난 22일 홈리스들의 공공장소 노숙 금지 여부를 놓고 청문 절차를 시작한 것이다. 지금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미국의 도시들, 뉴욕·로스앤젤레스·샌프란시스코·시애틀 등지에서는 수만 명이 공원, 광장 등의 텐트와 천막에서 삶을 이어가고 있다. 주 대법원들이 노숙자 수용 공간이 없을 경우 홈리스들을 체포하거나 벌금을 매기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했으나, 지방정부는 계속 늘어만 가는 이들을 막을 방법이 없어 연방대법원에 다시 판단을 맡긴 것이다.

부동산 시장, 완전히 방치한 정부

미국에 홈리스가 대거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다. 시장에 주택 공급을 내맡기고 정부와 지자체가 공공 주택 정책을 포기한 후 몇 년이 지난 시점이다. 미 프린스턴대 사회학 교수 매슈 테즈먼드는 지난해 11월 발간한 '미국이 만든 가난(Poverty, by America)'

가장 먼저 불로소득을 환수하라

에서 '착취'에 초점을 맞춰 가난을 이야기했다. 그는 건물주의 집세 착취, 금융 대출 및 이자율 착취, 주택 소유자들의 집값을 비싸게 팔려는 집단적 노력 등을 지적했다.

우리나라도 다를 바 없다. 지난 3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공개한 평당(3.3㎡) 분양가는 1749만원으로, 이는 8년 전인 2016년 3월(906만원)의 1.93배에 달한다. 매년 10~20%씩 상승했다는 의미다. 여기에 기반·편의·문화시설이 잘 갖춰진 수도권, 일부 대도시의 아파트 가격이 대폭 오르면서 주거비 급등을 이끌고 있다.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가 낮은 경우 '로또'라고 해서 청약 인파가 몰리고 부동산 업자와 투기꾼들은 각 도시를 돌며 저렴한 아파트들을 매입해 가격을 올려놓고 있다. 건설사, 부동산 업체, 투기꾼에 이제는 중산층까지도 아무런 죄의식 없이 규제가 전무한 부동산 시장에 뛰어들어 불로소득을 쌓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적절한 가격에 주택을 구하려는 실수요자는 '착취'를 당하고 전세 임차인은 거대한 사기 시스템의 희생양이 되고 있는 것이다.

과거 토지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비효율이었다. 데이비드 리카도가 차액지대로 설명했듯, 조선시대 토지는 수확량에 따라 상·중·하로 나눠 거래되었다. 같은 노동량을 투입해 쌀, 밀 등 식량을 더 수확할 수 있다면 그 토지를 구매 또는 임대하려는 경향이 벌어지고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이후 산업화·도시화는 이러한 구조를 완전히 뒤엎어버렸다. 어떤 시설이 어디에 들어서고, 집적되어 있는지, 편리하고, 접근성이 좋은지 등이 지가(地價)를 결정하게 된 것이다. 알프레드 마셜과 폰 튀넨이 위치를, 리처드 허드가 접근성을 지가의 핵심요소라고 한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여기서 위치, 집적, 편리, 접근 등을 만들어내는 것은 정부가 투자하

는 도로·철도·항만·공항 등 기반시설이다. 다시 말해 정부가 재정을 집중 투입하는 곳에 인구·기업·자본이 몰리고 땅값도 올라간다는 것이다. 수도권, 영남권의 땅값이 타 권역의 그것보다 높은 것은 이 때문이다.

불로소득, 모두를 위해 써야 한다

아파트가 주거지역만이 아니라 상업·공업·복지 등 모든 지역에 난립하고 있다. 정부-지자체가 부동산 경기 진작을 핑계로 규제를 풀고 인센티브까지 더해 개발 인허가를 쉽게 내주면서 곳곳이 고층아파트 숲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건설업체, 개발업체 등은 막대한 수익을 챙기고 있다. 그러나 정부-지자체의 개발 인허가 역시 국민과 시민이 위임한 공공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 누군가 천문학적 이익을 가져가는 것은 분명한 특혜다. 인허가를 둘러싼 모든 비리는 공공의 자산을 특정인이 독점하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기반시설의 설치, 개발 인허가, 부동산 소유 및 거래 등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철저히 분석해 그 가운데 상당 부분을 공공의 몫으로 거둬들여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지금까지 보수는 진보든 이를 게을리하고, 외면·방치해왔기 때문에 개발 비리와 부동산 투기가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제22대 국회는 자신의 노력 없이 또는 그 노력에 비해 더한 부를 쌓고 있는 특정 지역·세력·계층의 불로소득을 원천 징수하는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 이를 공공 재정으로 끌어들이어 국토 균형발전, 양극화 해소, 서민 주거비 절감 등을 위해 투입하는 것이 지방소멸 위기 해소, 저출산 극복, 미래 지속가능성 확보 등을 위한 방안이다.

社說

첫발 댄 영수회담,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초미의 관심사였던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영수회담이 그제 성사됐다. 현 정부 출범 이후 두 사람이 대화 테이블에 앉기까지는 720일이 걸렸다. 그만큼 전 국민의 관심이 모였고 회담 시간도 예정된 1시간을 넘겨 2시간 15분 가량 진행됐다.

첫 영수회담에 대한 평가를 종합하면 '첫발을 뗐지만 앞으로 갈 길이 험난하다'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대통령실을 비롯한 여당은 만남 자체에 의미를 두고 '협치의 첫발을 뗐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는 반면 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은 "땀이 들겠다"던 대통령이 자기 얘기를 더 많이 한 빈손 회담이었다"고 비판적으로 평가했다.

의제를 정하지 않은 만남이었던 탓에 이날 회담에선 합의문 같은 것은 발표되지 않았다. 이 대표가 거론한 채상병 특검과 가족의혹 정리 등 민감한 문제와 25만 원 지원금에 대해 대통령은 답을 하지 않았다. 한 가지 성과라고 한다면 정부가 의료개혁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대 증

원에 대해 이 대표가 공감을 표하며 협조하겠다고 한 것이다.

극한 대치 정국 속에 이뤄진 2년만의 만남이라 기대가 컸을 수도 있다. 하지만 첫 술에 배부를 수 없고 처음부터 큰 기대를 할 것도 아니다. 따라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 다행히 이 대표 "답답하고 아쉬웠다"면서도 "소통의 첫발을 뗐지만 앞으로 갈 길이 험난하다"며 향후에도 만남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협치의 키를 쥐고 있는 쪽은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이다. 이 대표는 이번 총선에서 확인된 민심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데 여기에 반응하고 변화하는 것은 오롯이 대통령의 몫이기 때문이다.

이 대표를 비롯한 범야권에서도 압도적 의석을 내세워 무작정 대통령을 압박해선 안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국 운영의 변화를 꾀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다. 우여곡절 끝에 첫 만남을 가진 만큼 더 열린 자세로 자주 만나 국민 앞에 성과로 답하길 바란다.

노후 아파트 경비원 휴게시설 절실하다

광주에는 총 1260단지 45만6298세대(2023년 8월 기준)의 아파트가 들어서 있다. 이 가운데 673단지 21만1945세대가 지어진 지 20년을 넘긴 노후 아파트이다. 비율로 환산하면 46.6%에 해당된다.

지난 2022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아파트 경비원, 청소소 및 환경미화원 등을 위한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했다. 그러나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가 시행된 지 2년이 다 돼가지만 광주 지역 공동주택 휴게시설 설치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일보 취재진이 남구 봉선동과 백운동 등 지어진 지 2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 10곳을 확인한 결과 2곳만 휴게시설이 무설치 기준을 충족했다. 봉선동 한 아파트는 지난해 지하에 휴게실을 설치했지만 경비원들은 열악한 지하 휴게실 대신 비좁은 경비초소를 그대로 이용하고 있었다. 다른 아파트 또한 지하에 컨테이너를 설치해 청소실 휴게실 용도로 사용하고

있지만 창문 등을 통한 환기가 어려운 환경이었다. 이처럼 아파트 경비원을 위한 휴게소 활용이 저조한 까닭은 지하에 위치하는데 공간이 협소하고 시설조차 열악하기 때문이다.

별도 휴게실을 갖추지 못한 노후 아파트 경비원들은 경비초소에서 식사와 취침은 물론 휴식까지 취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경비초소 마저 바닥면적 6㎡가 되지 않을 정도로 좁은데다 에어컨이 설치되지 않은 곳도 많고 식수시설 등 의무설비도 갖추지 못했다. 이렇다보니 휴식 시간에도 주민들의 민원이 밀려들어 맘편하게 쉬 수 없다.

아파트 경비원들의 '휴식할 권리'는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된 요즘 환경에서 에어컨과 환기시설, 식수 설비는 필수적이다. 오래되고 낡은 아파트일지라도 경비원들이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에서 정한 휴게시설은 갖춰야 한다.

無等鼓

5월의 또 다른 이름은 '가정의 달'이다. 5월이 가정의 달로 불리는 이유는 어린이날(5월)과 어버이날(8월), 부부의 날(21일) 등 가족과 관련한 기념일이 많기 때문이다. 1일은 근로자의 날이고, 15일은 스승의 날로 가족을 포함한 공동체의 화합과 행복을 위한 기념일이 잇따르는데, 직장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해서 한 달의 삼분의 일에 해당하는 십여 일을 할 수 있다. 요즘 젊은이들의 말로 '꿀'이다.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부르는 건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다.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5월을 가족을 위한 달로 정해 기념하고 있다. 굳이 유래를 찾자면 '세계 가정의 날'에서 기원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우리에게 스승의 날로 알려졌지만, 5월 15일은 1993년 UN이 제정한 '세계 가정의 날'(International Day of Families)이기도 하다. UN은 가정의 중요성을 인식해 건강한 가정을 위해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자는 취지로 이날을 제정했는데, 이후 전 세계 국가들이 '가정의 날'로 기

념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94년부터 가정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를 시작했고 2004년 2월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세계 가정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가족실천운동본부 등 13개 가정 관련 민간단체가 공동으로 다양한 기념행사와 캠페인을 하고 있다.

최근 한 인터넷포털이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 성인남녀의 절반가량이 어버이날의 공휴일 지정을 바란다고 응답해 시선을 끌고 있다. 그동안 어버이날을 어린이날처럼 공휴일로 지정하려는 논의가 끊임없이 이어졌지만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가운데 나온 결과여서 어떤 반향을 가져올지 기대된다.

이런 높은 지지는 단순히 쉬고 싶다는 욕구 표출을 넘어 가족 간의 사랑과 존중, 부모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을 갖고자 하는 이들의 바람에서 비롯됐을 것이다.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을 고려해보는 게 어떨까 싶다.

/김대성 제2사회부장 bigkim@

은펜칼럼



송민식
수필가전 여천교 교장

초록이 좋아서 산행을 떠나는 5월이다. 벌써 15년 전, 그날도 5월 23일 아침나절이었다. 키 큰 흰철쭉이 흐드러지게 핀 지리산 반야봉 등반길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병원 입원'이란 정전벽력과 같은 소식을 접했다. 인터넷을 보고 아내가 보내온 메시지였다.

눈을 의심했다. 아직도 그 육성이 귀에 생생한 전직 대통령의 자살은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1년 3개월 전까지 국가원수의 자리에 있던 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리라고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일이다.

전직 대통령이 자살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정치 현실에 분노가 치밀었다. 퇴임 이후 도덕적으로 파렴치한 사람으로 내몰려 얼마나 힘들었으면 죽음을 택하였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저미어 왔다. 전임자에게 예우는 못 해줄망정 모질고 아만적인 공격을 해낸다는 게 과연 문명한 사회에서 가능한 일일까.

직접 가서 조문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어 다음 날 새

봉하마을 조문 다녀오던 날

벽 6시 여수에서 아내와 함께 봉하마을로 향했다. 초·중·고교 입학과 입대 시기가 같은 동갑내기 노무현 전 대통령이라 평소에도 친근감을 느끼던 터였다. "더 많은 죄를 지은 사람도 사는 데 왜 죽어?"라고 말하던 이웃집 할머니 말이 계속 귓전에 맴돌았다.

김해시 진영읍 진영공설운동장에 차를 세워 두고 봉하마을로 가는 셔틀버스에 오르게 되었다. 마을 들머리에 내려서 분향소까지 1km 남짓. 걸어가는 길은 추모객의 인파로 꽉 메우고 있었다. 도로 양쪽에는 "당신은 영원한 우리의 대통령입니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등 추모의 글귀들이 고인에 대한 애통함과 그리움을 전하고 있었다. 봉하마을 어디에선가 노 전 대통령이 밭집모자를 쓰고 자전거에 손님을 태우고 금방이라도 손을 흔들며 뿔뿔 나타날 것만 같았다.

그동안 노 전 대통령은 힘겹게 살아가는 서민들의 희망이었다. 가난했던 학창 시절을 곳곳이 이겨내며 학벌 없고 배경 없는 보통 사람도 멋있게 살아가 수 있다는 걸 몸소 보여준 사람이 아니던가. 그는 많은 전직 대통령 중에서 유일하게 귀향하여 몸소 생태공원을 조성하고 자연 영생을 실천했던 사람이다.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봉하마을에 도착하자 신문과 방송 차량이 뒤영취 취재 열기로 가득했다. 기사를 송고하는 취재진과 요인들이 출입하는 문 앞에서 카메라 앵글을 맞추어 놓고

기다리는 기자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다. 방송사마다 모두 로고를 감추고 취재 중이었다. 피약발 아래서도 꾸역꾸역 모여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상주했고 추모객이었다.

분향소 곳곳에 나부끼는 " 지켜주지 못해 죄송합니다"라는 글귀가 가슴을 파고들었다. 분향소 앞에는 국화꽃을 들고 수많은 인파가 길게 늘어서 차례를 기다리는 조문객들의 표정이 슬픔에 겨워 엄숙했다. 고급 승용차 뒷좌석에 앉아 있을 법한 사람들은 보이지 않았다. 모두가 낮익은 우리의 이웃인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었다.

기다림 끝에 분향소에 안착된 대통령의 환하게 웃는 영정사진을 대하고 보니 눈물이 울려 솟았다.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사람대접받을 수 있는 세상, 국민이 주인 되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그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그는 자서전 '운명'에서 '비가 오지 않아도, 비가 너무 많이 내려도, 다 내 책임인 것 같았다. 아홉 시 뉴스를 보고 있으면 어느 것 하나 대통령 책임 아닌 것이 없었다. 대통령은 그런 자리였다.'고 했다. '대통령의 책망'이 거론될 때마다 회자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이다.

"살과 죽음이 모두 자연의 한 조각이다"라는 말을 남기고 부엉이바위에서 몸을 던진 노무현 전 대통령이야말로 영치를 아는 이 시대 마지막 한국 정치인이 아닐까 싶다.

지역 축제와 '예향 목포'의 정체성

뜻한 '신안 100+4 피아노섬' 축제 등 바다를 주제로 한 행사가 국·내외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독창성은 축제에서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다. 관광객 유치나 문화·예술 도시 조성에도 차별화된 콘텐츠는 필수 주제다. 예술분야로 눈을 돌려 보자.

SBS에서 '학전(學田) 그리고 김민기'를 3부작으로 방영하였다. '아침이슬'의 김민기가 33년간 운영해오다 최근에 폐관된 연극전용 소극장 '학전'의 역사를 되짚어 보며 연극발전예 현신한 김민기의 열정을 보여주는 내용인데 가슴이 뭉클했다. 방송을 보면서 '문화도시 목포'에도 '학전'처럼 폐관을 아쉬워할 만큼 사랑받는 소극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학전'이 소재한 '대학로'는 목포와 여건이 비슷하기 때문이다.

대학로를 예술의 거리라 하고 예술인들의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인다. 이곳에 거창한 공연장이 있거나 유명한 가수가 상설 공연하는 무대가 있어서가 아니다. 공연장이라 해봐야 불과 100~200석 규모의 연극전용 소극장 정도이지만 내용이 전문화·개성화 되어 있고 만이아들이 자발적으로 찾는다라는 것이다.

목포도 비슷하다. 오페라·뮤지컬을 향유할 수 있는 대형 공연장은 없지만 시민들이 문화를 사랑하고 즐길 줄 아는 격조 높은 도시일뿐 아니라 예향이라는 자부심이 남다른 지역이다. 또한 근·현대 여러 예술 장르에서 걸출한 인물들을 배출하면서 '문화예술 도시'로 불

리고 있다. 문학의 경우 차범석, 김우진, 박화성, 김현 같은 작가들이 목표와 연고가 있다. 현재 그분들의 생가가 잘 보존되어 있고 예술혼을 기리기 위한 기념관도 마련되어 있다. 여기에서 문학박람회도 매년 열린다.

목포가 예향다운 면모를 보여줄 특화된 시스템을 갖춘다면 대학로처럼 대한민국을 대표할 예술의 메카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잠재력이 충분하다. 장르별로 특색 있는 시설을 갖추고 그 장르를 대표할 수 있는 흥미롭고 창의적인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이 선결 과제인데 독특한 문화 정립, 정체성 확보가 관건이다.

정체성 측면에서 연극 전문 도시로 발전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만하다. 예를 들어 김우진과 윤심덕의 현해탄 사랑을 그린 연극 '사의 찬미'는 주인공 김우진의 문학 작품을 모아놓은 '김우진 책방'에서, 연극 '산불'은 원작자인 차범석 작가에서 공연한다면 다른 지역에서는 느낄 수 없는 장소와 역사성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을 것이다.

목포만이 가지고 있는 테마에 색깔있는 스토리를 입혀 예술의 본질에 목마를 수많은 만이아들이 목포를 찾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그러한 새 패러다임 없이는 문화 분야의 경쟁력 확보도, 예향도시 활성화도 한낱 부질없는 꿈에 불과할뿐이기 때문이다.

'예향 목포'가 상징성을 지닌 의미에 그치지 않고 예술적 감동이 시민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합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한다.

기 고



이현진
전 목포시청 국장·경영학 박사

'별도 불만한 것이 없다' '어디를 가 보아도 비슷하다'는 소리가 가끔 들린다. 전국 각지에서 펼쳐지는 축제를 두고 하는 말이다.

빛꽃과 국화 등 꽃을 주제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어느 축제를 가더라도 트로트·댄스공연, 먹거리 장터, 불꽃놀이 같은 비슷한 체형거리로 짜여 있어 그 축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각각 지니고 있는 독특한 특징을 살려 다른 지역과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는 외국의 유명 축제와는 대조적이다. 우리도 지역의 정체성을 살린 감동적인 축제를 통해 관광객을 불러 모을 통로를 만들어야 한다. 자치단체가 세계를 상대로 경쟁하며 지역발전을 이끌 동력을 스스로 찾아야 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이다. 이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다른 곳에서 따라할 수 없는 독창적인 프로젝트를 펼치는 것이 중요하다.

다행스러운 것은 항구의 정체성을 인정받아 우수 문화축제로 선정된 '목포 항구축제'와 '해상 W쇼'를 비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張必洙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5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3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64	체육부 220-0697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80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